닻 올린 與 정진석 비대위… '계파·사법 리스크' 산 넘어 산

친윤 비판에 "비윤 구성이 옳은가"
"당 혼란 정비, 민생 회복 위해 노력"
이준석 가처분 신청 문제 '숙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부터 계파·사법 리스크에 휘말렸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인선한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친윤(親윤석열)' 색채가 짙은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출범 관련 법적 다툼도 본격화하면서다.

정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집권여당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집권여당이 제 역할을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당 정상화 및 민생 회복 관련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원들도 당 혼란은 정비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3선의 김상훈 비대위원은 "지금 당이 싸움터가 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심과 민생을 살피지 못하는 정당이 돼 간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선의 전주혜 비대위원도 "국민 삶이 매우 팍팍하고 어려운 때 국민의힘이 합심해 민생을 돌보고 민생을 보듬는 정책을 하겠다"며 "조속히 당 혼란을 매듭짓고 국민 정당, 민생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진석 비대위는 당 정상화 차원에서 이날 첫 안건으로 새 원내대표 선출에 필요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이며, 박형수·박대수·양금희·윤두현·전봉민·한무경 의원 등 원내부대표 6명이 선관위원에 인선됐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가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새 지도부 선출까지 마무리하기에 갈 길은 멀다. 당장 '친윤' 위주 비대위 구성 논란부터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20년 지기인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비대위원직을 맡지 않기로 번복했지만, 상황이 수습되지 않는 분위기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시기 문제도 정 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등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문제도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이 친윤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14일, 1차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럼 뭐 비윤석열 성향으로 구성하는 게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나름대로 지역 안배를 했고 통합에 애를 썼다. 최선의 비대위원 구성을 마쳤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김병민 비대위원도 같은 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선거를 함께 치렀던 수많은 사람이 국민의힘에 존재한다"며 비대위가 친윤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반박했다.

차기 당권 주자 중심으로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전당대회 시기는) 비대위원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우선 정기국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기조"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 전당대회 개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시사한 대목이다.

한편 비대위가 풀어야 할 법적 문제는 28일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이후 결론이 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고 시사한 만큼 당분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14일 오전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당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을 했고, 28일 예정된 정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결론 낼 것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野, 대통령실 의혹 겨냥 '진상조사단' 출범

"국정조사 통해 의혹 밝힐 것"
단원으로 상임위 소속 의원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실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단원으로 구성해 대통령실의 의혹을 조사하고 대(對)국민 제보를 받는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엔 박홍근 원내대표, 한병도 진상조사단장, 김영배 간사, 고민정 최고위원,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주(운영위·국방위)·최기상(행안위)·이탄희(법사위)·장철민(국토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이 열거한 대통령실 관련 의혹은 대통령실 용산 국방부 청사 졸속 이전,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추계 실패, 김건희 여사 지인의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 수주, 대통령 부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민간인 동행, 김건희 팬클럽에 대통령의 미공개 사진 유출, 대통령실 지인 사적 채용, 집중 호우 시 대처 능력 부족 등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외희에서 "취임 후 국가 안보와 비용에 대한 검토 없이 청와대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아마추어 정권인 것을 자인했다"며 "용산 이전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공사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수주 의혹으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내부 감찰로 하급 실무진을 무더기로 교체하더니 '육상시' 검핵관(검찰 핵심 관계자)는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을 발본색원하겠다. 진상규명단은 기재위, 국방위, 예결위, 운영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전문성을 살려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단장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관련 의혹을 밝혀낼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국민 여러분의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의혹이 있어서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면 당에 제보해 달라. 윤석열 정부의 국민 혈세 낭비에 확실히 제동을 걸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인 지난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요구서엔 민주당과 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의원의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구서가 제출됐기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李 "당 비상상황 억지" vs 與 "정치적 행동"

이준석 전 대표 "당헌 개정안 무효"
국민의힘 "李, 가처분 신청 자격 없어"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관련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비대위 전환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무효라는 게 이 전 대표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4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주호영 전 비대위 당시 비대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당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주 전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사건 심문을 했다.

법정에는 이 전 대표가 채권자 자격,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혜 의원이 채무자 자격으로 출석해 양측 입장을 밝혔다.

심문에서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국민의힘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1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3주 동안 전국위에서 보궐로 최고위원 선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유도, 비대위 구성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당은 지난 5일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4명 이상 궐위'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당헌에 대해 '이미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상황에서 만든 소급입법이며, 이 전 대표 궐위를 목적으로 한 처분적 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전 의원은 1차 가처분 결정 당시 주 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만 내렸고, 비대위 관련 사항은 각하한 만큼 당시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당에서 비상 상황을 규정한 행위 역시 '정치적인 행동'이라며, 사법적 판단은 내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영훈 기자

尹 "기술인재 넘치는 나라 만들 것"

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에 나서는 국가대표 선수단과 만나 선수들을 격려하며 기술인재가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인천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방문해 직접 훈련 현장을 둘러보면서 훈련과정을 체험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기능올림픽 대회 개최 이전에 대통령이 선수들을 직접 만나 격려한 것은 3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가구 제작, 모바일 앱 개발, 광전자기술 종목의 훈련실을 차례로 들러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보면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을 향해 "선수들이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진학 대신 기술로 최고가 되려는 길을 선택한 청년기술인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이번 기능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인천 부평구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방문해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정익 기자 pathfinder@